



농촌진흥청, 현장 중심의 역점과제 추진· 하반기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속도 높인다

- 농작업 안전, 케이(K)-농업기술, 농업혁신, 농촌 활력, 기후 대응
5대 과제에 역량 집중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7월 1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정부 핵심 정책인 농업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 등을 뒷받침할 역점과제를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❶현장 밀착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❷케이(K)-농업기술 세계(글로벌) 확산 및 수출지원 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농업혁신 ❹농업·농촌 활력 제고 ❺기후 적응형 농업 및 탄소중립 대응 5대 역점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❶ 현장 밀착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폭염에 대비해 지난 5월, 현장에 배치한 온열질환 예방 요원 1,000여 명은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 10만 농가를 대상으로 밀착 지원에 나선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상반기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 대상 5,000 농가의 위험·유해 요인을 신속히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농작업 시 신체 부담을 줄여주는 웨어러블(착용형) 근력보조장치 등 안전·편이 장비 5종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국가승인통계)’를 신규 공표함으로써 재해 예방정책의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② 케이(K)-농업기술을 세계화하고,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코이카(KOICA)와 협력해 라오스와 방글라데시에서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지도 인력 양성을 맡아 농촌 개발을 지원한다. 몽골·키르기스스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축산·벼 재배 등 케이(K)-농업기술을 신속하게 확산해 나간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브라질·중국 등 주요 협력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멕시코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의 케이(K)-낙농기술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③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혁신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농업기술 특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인 'AI 이삭이'와 17개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작물 재배부터 병해충 관리까지 농업인에게 필요한 기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한다. 또한, 음성인식서비스와 농가경영진단 기능을 탑재한 'AI 이삭이 2.0'을 9월에 출시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정보시스템(17): 병해충 진단서비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등

지난 7일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로 하늘에서도 농업을 살피는 시대가 막을 열었다. 고품질의 위성영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영상 검·보정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농작물·농경지 모니터링 정보(51종*)를 단계적으로 제공해 위성 데이터 기반의 과학 농정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한다.

* 농작물 관측 정보(재배면적 17종, 출하 면적 4, 생육 정보 14, 수량 7), 농지피복 변화(2종), 농업재해(침수·도복·병충해), 농업환경(토양수분·증발산·가뭄) 등

④ 농업·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해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안정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업인의 국가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 우대요건을 신설·강화한다.

*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국민참여형 사업) 청년 30% 이상 배정

국민의 치유농업 접근성을 높이고, 농가의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해 치유농업 산업화 모델 7종을 개발, 확산한다. 아울러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인증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품질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치유농업시설 인증 목표(누계): ('26) 150개소 → ('27) 200 → ('30) 300

⑤ 기후 적응형 농업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선다.

‘전국 농업기상재해 관제시스템’을 12월까지 고도화해 재해 정보와 대상 작물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저온·고온과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사과·복숭아 주산지를 중심으로 피해 경감 기술을 확산한다.

* (재해) 저온·고온해→ 풍수해, 동해 등 추가, (작물) 4종(사과·배·포도·복숭아)→ 15

질소비료 사용량을 최대 25% 절감하는 깊이거름주기 기술을 현장 실증해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한우 등 반추동물의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사료 소재를 산업화해 저탄소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한다.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자 비료 처방 정보를 농협 등과 연계해 농업인의 적정량 구매도 유도한다.

농촌진흥청은 5대 역점과제 이외에 지방주도 성장 과제와 국가정상화 과제 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지원 대상을 기존 26개 작목(대표·집중육성)에서 지방정부 자체 육성 작목까지 포함하여 총 46개 작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앙-지방 간 협업 연구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기술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정상화 과제로는 전체 농작업 사망사고 중 비중이 큰 농기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농기계사고 감지 시스템과 119 상황실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전장치 부착 점검과 사고원인 분석을 체계화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인공지능(AI)과 농림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김은숙 (063-238-0410)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광수 (063-238-0411)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